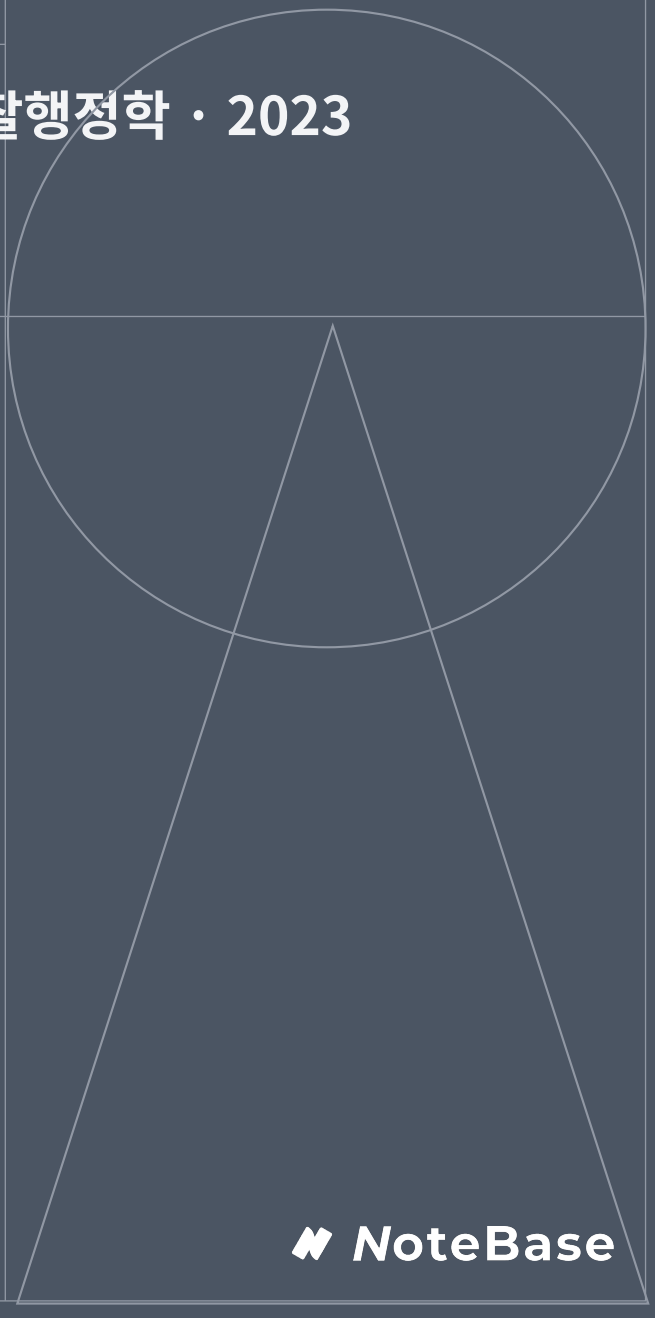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3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3

문 1.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피라미드는 피규제자의 규제 불응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②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피규제자에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③ 사회적 규제는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로서, 사회적 규제의 역사는 경제적 규제의 역사보다 짧다.

④ 규제의 역설이란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규제가 가진 본래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행위만 열거하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되는 행위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므로,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규제피라미드는 피규제자가 기존 규제를 따르지 않거나 회피할 때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규제를 추가하면서 **규제가 누적되는 현상**이다. 추가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시 규제가 생겨나면 피규제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부담도 늘어난다.

② X: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할 행위만 열거하고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피규제자의 활동 범위와 자율성을 더 넓게 보장하는 방식은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이다.

③ O: 사회적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제이다. 환경오염 방지, 산업안전, 소비자의 건강·안전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통적 분류에서 가격·시장진입 등을 통제하는 경제적 규제는 일찍 발달한 반면, 사회적 규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1960~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경제적 규제보다 역사가 짧다**고 설명한다.

④ O: 규제의 역설은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켜 **본래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이다. 규제 대상자의 행동 변화나 간접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를 줄이려는 규제가 오히려 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단순히 기대한 효과가 작다는 데 그치지 않고 목적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2.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중 하나인 민간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생산·공급하는 것으로서 외주라고도 한다.

② 민간기관들 간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거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한다.

③ 교육시설, 탁아시설 등에 보조금이나 현물을 주어 민간에서 공공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회피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교육시설·탁아시설 등에 자금이나 현물을 지원하여 공공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 방식**이다. 이 문항의 민간위탁은 정부가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공급을 맡기는 방식**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민간위탁은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결정하되 **실제 생산·제공은 계약을 맺은 민간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다. 정부 내부에서 직접 생산하던 서비스를 외부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외주라고 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은 남는다.

② O: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민간기관 사이의 경쟁**을 활용하면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유인이 생긴다. 생산비용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 공급은 민간위탁의 기대효과이며, 경쟁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실현될 수 있다.

③ X: 교육시설·탁아시설 등에 보조금이나 현물을 지원하여 민간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 방식**의 설명이다. 정부가 계약을 맺어 특정 서비스의 생산·공급을 맡기는 민간위탁과 구별된다. 민간이 공공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만으로 두 방식을 같게 볼 수는 없다.

④ O: 민간위탁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과 민간기관의 실제 서비스 제공이 분리된다. 계약에서 업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와 수탁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최종적인 관리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3. 공공재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은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비해 생산비용이 빨리 증가하는 것을 설명한다.

② 뷰캐넌(Buchanan)의 다수결투표는 예산규모를 팽창시키고 공공재의 과다 공급을 초래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③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공공재의 경우 세금납부자인 시민이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해 적은 편익이 돌아간다고 인식하는데, 이러한 재정착각의 상황에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여 공공재가 과소 공급된다고 주장한다.

④ 피콕과 와이즈만(Peacock & Wiseman)의 전위효과는 위기 시에 증가한 재정수준은 정상적으로 회복된 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공공부문의 노동집약적 성격과 낮은 생산성 증가율 때문에 단위당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보몰의 비용질병**이다. 리바이어던 가설은 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세수입과 재정규모를 극대화**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공부문의 생산비용 상승을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설명하는 것은 '보몰의 비용질병'이다.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생산성 향상이 더디지만 임금은 민간부문과 함께 상승하므로 **생산성 증가를 웃도는 임금 상승**이 단위당 비용을 높인다. '리바이어던 가설'은 정부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로 보고, 제도적 제약이 약하면 조세수입과 재정규모를 극대화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② O: 뷰캐넌의 다수결투표에 관한 설명에서는 다수파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결정하면서 **비용의 일부를 소수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사업을 지지하는 다수파가 사회 전체의 비용을 모두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넘는 사업도 채택되어 예산 팽창과 공공재의 과다 공급이 나타날 수 있다.

③ O: 머스그레이브는 시민이 세금 부담에 비해 공공지출의 편익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공공재가 과소 공급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로처럼 일상적으로 누리는 서비스의 편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쉬워, **공공재의 편익을 과소평가**하면 자신이 낸 세금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재정착각은 조세 저항과 공공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 약화로 이어진다.

④ O: 피콕과 와이즈만의 '전위효과'는 전쟁 등 위기를 거치며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수용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의 재정규모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위기가 끝나도 **재정규모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높아진 수준을 유지하며, 위기 대응에 쓰이던 재원이 복지 등 다른 사업의 지출로 전환된다. 따라서 재정규모의 증가는 매끄러운 연속적 증가보다 위기를 계기로 한 계단식 증가로 설명된다.

NoteBase

문 4.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의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속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정부실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③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가설에 따르면, 정부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 생산수준보다 과잉생산을 하게 되어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시장실패**의 문제이다. 정부실패는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이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경우를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로 보고, 정부가 항상 공익에 맞게 행동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에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도입하면 독점적 공급에서 생기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보므로,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정부실패의 대응 방향으로 제시한다.

② X: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공공재는 무임승차가 가능하여 민간 공급자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기 쉽다. 따라서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요인**이며, 정부실패의 요인으로 분류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③ O: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애초에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영향을 낳는 현상이다. 그중 부정적 효과가 정부실패를 일으키므로, 불필요한 정부 보조를 삭감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작용을 낳는 정부 개입을 조정**하는 방식이 대응책으로 제시된다.

④ O: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가설은 관료가 보수·권력·명성 등 자신의 효용과 연결되는 소속 부처의 예산을 늘리려 한다고 본다. 이때 사회적 순편익보다 예산 확대를 우선하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사회적 적정 수준을 넘어 공공서비스를 과잉생산**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NoteBase

문 5. 행정가치 중 하나인 효율성(efficienc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된다.

②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상태는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준으로,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③ 기계적 효율성은 효율을 수량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과거 정치 행정일원론의 시대에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요시된 효율관이다.

④ 사회적 효율성은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효율관으로,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계적 효율성은 행정을 정치와 구분하여 관리·집행의 능률을 중시한 **정치·행정 이원론**과 연결된다. 선지의 '정치 행정일원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효율성은 투입한 인력·예산 등에 비해 얼마나 많은 산출을 얻었는지를 나타낸다. 같은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거나 같은 산출을 더 적은 투입으로 얻을수록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조직 내부의 비용과 산출의 관계**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② O: 파레토 최적은 **누구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높이는 재배분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자원을 재배분하여 모두에게 손해 없이 후생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다만 분배의 공평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기계적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수량적·금전적으로 파악하는 효율관이다. 이를 중시한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대이다. 정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이를 집행한다고 구분하면서, 행정 내부의 관리 기술을 개선하여 집행 비용을 줄이고 산출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정치 행정일원론'이라는 시기 연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④ O: 사회적 효율성은 수량적 성과만으로 행정의 가치를 평가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사회적 목적의 달성과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 실현**을 중시한다. 조직 구성원의 의사와 욕구를 존중하는 민주적 관리까지 고려하므로 민주성의 개념으로도 이해된다.

NoteBase

문 6. 행정개혁(행정혁신)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행정 활동이나 관료 행위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한다.
㉡ 탈신공공관리론(Post NPM)은 신공공관리론을 수정·보완하는 관점에서 조직의 구조적 분화 강화, 적극적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한다.
㉢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적 해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집단적 역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은 국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탈신공공관리론은 조직의 분화를 더 강화하기보다 **분절된 조직의 통합과 조정**을 중시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국민을 서비스 구매자인 고객보다 **공익 형성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본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도 민간기업의 관리 원리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경쟁과 성과관리 등 **기업식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개선하려 하므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토대로 행정 활동과 관료 행위의 관행을 개선한다는 설명에 부합한다.

㉡ X: 조직의 구조적 분화와 규제 완화는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인 개혁 방향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이러한 개혁으로 나타난 조직 간 분절과 조정의 어려움을 보완하려 하며, **조직의 통합·조정과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 O: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가 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신뢰·호혜성·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므로, 시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기르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 X: 국민을 고객으로 보고 서비스의 질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고객 지향적 접근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국민을 **공익을 함께 형성하는 시민**으로 인식하며, 대화와 참여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찾고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과 ㉢이며,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7. 정치행정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이원론의 대표학자인 윌슨(Wilson)은 19세기 후반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②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은 정당정치 및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④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책결정은 정치, 정책집행은 행정**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정책결정에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설명은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19세기 후반 미국의 진보주의적 개혁운동은 정당의 인사개입과 부패를 줄이고 전문적·능률적인 행정을 확립하려 했다.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은 이러한 **행정개혁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다.

② O: 정치행정이원론은 국가의 목표와 정책 내용을 결정하는 기능을 정치에,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기능을 행정에 배분한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정책의 선택보다 **집행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중시한다.

③ O: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정치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직을 배분하여 부패와 비능률을 낳았다. 정치행정이원론은 정당정치의 부당한 간섭에서 행정을 분리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개혁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④ X: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역할을 **정치가 결정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둔다. 행정이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것은 정치와 행정의 연관성 및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일원론의 설명이다.

NoteBase

문 8. 정부관의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② 신자유주의는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③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큰 정부는 시장실패에 대응해 규제와 복지정책 등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는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 방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대공황으로 시장의 자율적 조정만으로 불황과 실업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케인스주의는 정부의 재정지출 등을 통한 **총수요 확대와 경기 안정**을 강조하였고, 루스벨트의 뉴딜정책도 공공사업과 사회보장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둘 다 큰 정부관과 연결된다.

② O: 신자유주의는 과도한 정부개입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실패에 주목한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 역할을 줄이고 시장경쟁을 확대**하려 하므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③ X: 큰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와 재정지출 등 정부개입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의료보험과 같은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정책을 통한 적극적 역할이라는 부분은 큰 정부관에 부합하지만, 이를 규제 완화와 연결한 부분은 부합하지 않는다. 규제 완화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작은 정부관의 대표적 정책 방향이다.

④ O: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쟁과 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민영화·민간위탁 등으로 정부의 직접 수행 기능을 줄이고 성과 중심 관리를 강조하므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

NoteBase

문 9.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은 과학적관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행정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존재하므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원리를 발견해 행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귤릭(Gulick)은 비공식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 통제위주의 관료제를 중시하였다.

③ 사이먼(Simon)은 전문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등은 상호간에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논박하였다.

④ 신행정학은 1968년 미국 미노브룩회의에서 왈도(Waldo)의 주도하에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모색으로 태동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귤릭은 조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공식적 구조와 관리원리**를 중시하였다. 비공식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설명은 그의 행정관리론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행정관리론은 과학적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원리**가 있다고 보았다. 분업·명령통일·통솔범위 등의 원리를 발견하고 조직 전체의 관리에 적용하여 능률을 높이려 하였다.

② X: 귤릭은 행정관리론의 대표 학자로서 분업, 권한과 책임, 명령통일 등 **공식적 조직구조와 관리원리**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비공식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공식적 지휘·통제체계를 강조한 고전적 접근이며, 구성원의 감정이나 비공식집단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간관계론과 구별된다.

③ O: 사이먼은 전문화·명령통일·부성화 등의 원리가 **서로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할지 알려 주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분야별 전문가의 지시를 받게 하면 전문성은 높일 수 있지만 한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와 충돌한다. 부서를 목적·과정·고객·지역 중 무엇을 기준으로 묶을지도 원리의 나열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처럼 적용 조건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과학적 법칙보다 격언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④ O: 신행정학은 **1968년 왈도가 주도한 미노브룩회의**를 계기로 등장하였다. 당시의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에 행정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능률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현실 문제에 대한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NoteBase

문 10. 공공선택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요 학자로 뷰캐넌(Buchanan)과 털럭(Tullock)이 있다.

②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③ 공공선택론은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④ 티부(Tiebout) 모형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은 관료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관청의 업무와 조직 형태를 바꾸려 한다고 본다. 공적이익을 사적이익보다 우선시한다는 설명은 이 전제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공선택론은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추구한다는 경제학적 가정을 정치·행정의 의사결정에 적용한다. 뷰캐넌과 털럭은 공동 저서인 '동의의 계산'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의 규칙을 분석한 대표적인 공공선택론 학자이다.

② X: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은 관료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자**로 본다. 관료는 자신이 선호하는 업무와 조직 형태를 추구하며, 특히 고위 관료는 일상적인 집행·관리보다 정책결정·자문 업무를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적이익을 사적이익보다 우선시한다는 설명은 모형의 전제와 다르다.

③ O: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경쟁·선택 등 시장의 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려 한다. 그러나 공공재 공급이나 외부효과, 독점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의존하면 **시장실패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시장 원리의 도입이 언제나 효율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이다.

④ O: 티부 모형은 주민이 조세 부담과 공공서비스의 조합을 비교하여 선호하는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발로 하는 투표'를 설명한다. 이때 한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다른 지역에 편익이나 비용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역 간 외부효과의 부재**를 가정한다. 외부효과가 있으면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해당 지역 안에서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지역 선택만으로 효율적 공급을 설명하기 어렵다.

NoteBase

문 11. 정책의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관점이 다른 하나는?

①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이론

② 벤틀리와 트루먼(Bentley & Truman)의 이익집단론

③ 밀스(Mills)의 지위접근법

④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벤틀리와 트루먼의 이익집단론은 여러 집단의 경쟁과 타협을 강조하는 **다원론**이다. 나머지 이론은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이나 그에 따른 의제 통제를 강조하는 **엘리트론 계열**이다.

선지별 해설

비교 기준은 정책 과정의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다고 보는지, 여러 이익집단에 분산된다고 보는지이다.

①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이론: 신엘리트론에 속한다. 지배집단에 불리한 요구가 공식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배제·억압하는 과정도 권력의 행사로 본다. 이미 채택된 안건의 결정뿐 아니라 **무엇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주목한다.

② 벤틀리와 트루먼의 이익집단론: 다원론에 속한다. 권력이 여러 이익집단에 분산되어 있고, 각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정책의제와 정책은 이러한 **집단 간 경쟁·타협·조정**을 통해 형성된다.

③ 밀스의 지위접근법: 엘리트론에 속한다. 정치·경제·군사 부문의 핵심 기관에서 **최고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을 권력엘리트로 파악한다. 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④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엘리트론에 속한다. 민주적으로 출발한 조직도 규모가 커지고 전문적인 지도력이 필요해지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수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다고 본다. 다수 구성원보다 지도부가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는 경향을 설명한다.

따라서 소수의 지배나 의제 통제를 강조하는 ①·③·④와 달리, 여러 집단에 분산된 권력과 집단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②가 관점이 다르다.

NoteBase

문 12. 로위(Lowi)의 정책 유형 중 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과 관련된 복잡한 상호작용 없이 단순하게 개별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세부사업의 집합이 정책을 구성하게 된다.

② 정책에 따라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보는지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제로 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거나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

④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 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분배정책은 혜택을 특정 집단에 제공하되 비용은 넓게 분산하므로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의 직접적인 대립이 약하다. 누가 혜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가 뚜렷해 **제로 섬 게임**과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규제정책**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분배정책은 보조금이나 공공사업처럼 특정 개인·집단·지역에 혜택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혜택은 특정 대상에게 집중되지만 비용은 조세 등을 통해 넓게 분산된다.

① O: 분배정책은 **세부사업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결정**할 수 있다. 한 사업의 수혜자를 정하는 일이 다른 사업의 수혜자를 직접 배제하지 않으므로, 개별화된 결정과 사업이 쌓여 전체 정책을 구성한다.

② X: 혜택을 얻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직접 대립하는 제로 섬적 관계는 규제정책의 특징이다. 분배정책에서는 수혜자가 비교적 뚜렷해도 비용 부담은 넓게 분산되어 **수혜자와 부담자 간 직접적인 갈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③ O: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사업을 반대하지 않고 지지를 교환**하면 각자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같은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연합을 뜻하지 않는다.

④ O: '로그롤링'은 서로 원하는 사업이 통과되도록 **찬성표나 지지를 교환**하는 것이고, '포크 배럴'은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선심성 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현상이다. 분배정책에서는 여러 지역·집단의 사업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어 이러한 정치적 거래가 나타나기 쉽다.

NoteBase

문 13.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엄밀히 구분해서 바라보는 이원론적 접근을 취한다.

②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③ 일선관료가 정책집행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④ 집행의 제도적 구조, 집행 자원 배분 등 집행의 거시적 틀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이다. 상향식 접근은 집행 현장에서 정책 내용이 구체화·수정된다고 보므로 **결정과 집행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는 이를 실행한다고 구분하는 이원론적 관점은 **하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상향식 접근에서는 일선 집행자의 판단과 대상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수정되므로 결정과 집행을 엄밀히 분리하기 어렵다고 본다.

② O: 상향식 접근은 중앙에서 정한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만을 출발점으로 삼기보다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현장의 문제와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집행 활동과 지원을 살핀다.

③ O: 일선관료는 정책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재량을 행사한다. 상향식 접근은 이러한 **일선관료의 재량과 현장 지식**이 실제 정책 내용과 집행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④ O: 상향식 접근은 현장 행위자의 자율성과 상호작용에 집중하므로, 이들의 활동 범위를 정하는 **제도적 구조와 중앙의 자원 배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장의 재량도 법적 권한, 조직 구조, 예산 등의 거시적 제약 속에서 행사된다는 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향식 접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NoteBase

문 14.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②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 된 이후 참여자들 간 공개적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없는 경우 예측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예측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④ 주요 정책이슈의 잠정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반대의견을 창출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을 적용하므로, 초기에는 익명으로 의견을 수집하되 정책대안에 관한 주장들이 드러난 뒤에는 **공개적 토론을 허용한다**.

선지별 해설

정책 델파이는 정책쟁점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그 근거를 드러내어 대안을 검토하는 판단적 예측기법이다. 전문가의 합의 도출을 중시하는 전통적 델파이와 달리, 서로 대립하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① O: 정책 델파이에는 해당 쟁점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가진 참여자들의 견해가 반영된다. 따라서 대안을 평가하고 주장을 제시하는 과정에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② X: 정책 델파이의 익명성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토론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초기 의견 수집 단계에서는 익명성을 유지하지만,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뒤에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 이를 선택적 익명성이라고 한다.

③ O: 경험적 자료나 적용할 이론이 없어 객관적인 예측이 어려울 때에는 참여자의 지식·경험·통찰에 기초한 주관적 판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정책 델파이는 이러한 **판단적 예측**에 속하며, 반복적인 의견 수집과 환류를 통해 판단과 그 근거를 검토한다.

④ O: 정책 델파이는 잠정적인 해결책에 대해 찬성 의견뿐 아니라 **가능한 반대의견과 그 근거**도 적극적으로 끌어낸다. 이를 통해 대안의 약점과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므로, 반드시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개적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②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15.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앨리슨(Allison)모형은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다.

③ 최적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과 관련해 위험최소화전략 대신 혁신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해당한다.

④ 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최적모형에서 상위정책결정은 **정책결정 자체의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것**이다. 위험최소화전략 대신 혁신전략을 취할지 정하는 것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문제·해결책·선택기회·참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결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쓰레기통모형**이다. 앨리슨모형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합리적 행위자의 선택으로 보는 합리모형, 조직의 관행과 표준운영절차의 산물로 보는 조직과정모형, 참여자 간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 보는 관료정치모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② X: 만족모형은 인간의 정보와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대안을 빠짐없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다가 **만족할 만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을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선택한다.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는 설명은 합리모형에 가깝다.

③ O: 최적모형의 상위정책결정은 개별 정책을 선택하기에 앞서 정책결정의 기본 방향·체제·전략을 정하는 단계이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따를지,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을 따를지 정하는 것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의 결정**이므로 상위정책결정에 해당한다.

④ X: 회사모형은 불확실한 먼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여 장기 전략을 세우기보다 **단기적 피드백에 반응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표준운영절차 등을 활용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회피한다고 본다. 조직 내부의 상충하는 목표도 한꺼번에 완전히 통합하기보다 목표에 순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만족 가능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등 갈등을 준해결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부분이 회사모형의 설명과 다르다.

NoteBase

문 16. 정책평가의 실험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무작위배정과 사전측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성숙효과는 실험대상자들이 사전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③ 실험 중에 피실험자의 일부가 탈락하여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상실요인이라고 한다.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것은 외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전측정 내용에 익숙해져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은 **검사효과**이다. 성숙효과는 처치와 별개로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무작위배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특성 차이를 줄여 선발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사전측정 자료는 초기 집단 차이와 탈락자의 특성을 확인하여 선발·상실에 따른 편향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들이 **실험 중 탈락 자체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

② X: 사전측정 내용에 익숙해져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은 **검사효과**이다. 성숙효과는 정책처치와 별개로 시간이 지나면서 실험대상자에게 성장·노화·피로 등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생겨 측정값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③ O: 상실요인은 실험 도중 일부 대상자가 중도 포기·이동 등으로 탈락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특히 탈락자의 특성이나 탈락 정도가 집단마다 다르면 **남아 있는 집단의 구성이 달라져**, 그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④ O: 외적 타당성은 실험결과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날 특성을 가진 집단만 의도적으로 선정하면 그 집단의 특성과 정책처치가 결합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다른 집단이나 정책대상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는 선발과 처치의 상호작용에 따른 외적 타당성 저해이다.

NoteBase

문 17. 제3섹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3섹터는 민간부문이 비영리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영역을 포함한다.

② 비정부조직(NGO)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③ 제3섹터는 정부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조직이다.

④ 비정부조직(NGO)은 시민의 자발적·자원적(voluntary) 참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자치적(self-governing) 특성을 지닌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부·시장과 구별되는 자율성이 있다는 것은 조직체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제3섹터 조직은 **일정한 조직체계와 지속성을 갖춘 제도화된 조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3섹터를 넓게 보면 정부의 비영리활동과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중간영역을 뜻한다. 따라서 **민간의 비영리활동과 공공기관의 영리활동**을 포함한다.

② O: 시장은 수익성이 낮은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수 있고, 정부도 획일적 공급이나 관료제의 비효율로 다양한 시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NGO는 이러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시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등장·성장하였다.

③ X: 제3섹터 조직은 일정한 목표, 내부 조직체계와 지속성을 갖춘다는 점에서 **제도화된 조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정부·시장과 구별되는 자율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식적·비제도적인 조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조직성은 반드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NGO의 자원성은 시민이 강제 없이 스스로 참여한다는 뜻이고, 자치성은 **자체 의사결정 절차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직접 지휘에 종속되기보다 구성원의 참여와 내부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활동한다.

NoteBase

문 18.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론은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 아닌 합리성(rationality)을 전제로 한다.

② 사전 거래비용은 거래 계약을 위한 정보취득 및 거래협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며 사후 거래비용은 이행감시비용을 포함한다.

③ 자산의 특정성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거래가 어려워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④ 거래비용과 내부관리비용과의 비교를 통해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수직적 통합 전략이 효과적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거래비용이론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려 하지만 정보와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완전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거래비용을 설명하는 출발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거래비용이론의 인간관은 **제한적 합리성**이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의 모든 상황을 계약에 빠짐없이 담기 어렵다.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을 배제하고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② O: 사전 거래비용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거래 상대방과 조건에 관한 정보취득비용, 협상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등이 포함된다. 사후 거래비용은 계약 체결 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이행감시비용 등이 포함된다.

③ O: 자산의 특정성은 특정 거래에 맞추어 투자한 자산을 **다른 용도나 거래 상대방에게 전환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특정성이 높으면 기존 거래를 중단할 때 자산가치의 손실이 커져 상대방에 대한 의존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협상·감시·계약 보호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④ O: 수직적 통합은 외부와 계약하던 연속된 생산·공급 활동을 하나의 조직 안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시장 거래비용이 내부관리비용보다 크면** 외부 거래를 내부 조직의 지휘·조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따라서 두 비용을 비교하여 수직적 통합의 효과를 판단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①이다.

NoteBase

문 19. 조직구조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공통기능별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사업부서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부서 내 기능 조정 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 간 기능 조정은 곤란해진다.

③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에서는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 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④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에서는 각 기능부서를 사업별로 운영함에 따라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진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성과책임을 사업별로 분명하게 하는 것은 **사업구조**의 특징이다. 매트릭스구조는 기능부서장과 사업책임자의 **이중 지휘체계**로 인해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능구조는 인사·재무·생산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묶는 조직구조이다. 공통기능의 인력과 설비를 통합하여 중복을 줄이고 전문화하므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② O: 사업구조는 제품·지역·고객 등 사업 단위별로 필요한 기능을 묶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각 사업부서 안에서는 하나의 사업목표와 책임자 아래 여러 기능을 조정하기 쉽지만, 사업부서들이 자기 사업의 목표를 우선하면 **사업부서 간 협조와 조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③ O: 네트워크구조는 조직 내부에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기능**을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전문성을 가진 외부 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모든 기능을 자체 부서로 보유하지 않고 외부 조직의 자원을 연결하여 활용한다.

④ X: 매트릭스구조는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조직을 결합하여 구성원이 **기능부서장과 사업책임자의 지휘를 함께 받는** 구조이다. 이중 지휘로 명령이 충돌하거나 권한·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사업별로 필요한 기능을 묶고 각 사업부서에 성과책임을 부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업구조의 특징이다.

NoteBase

문 20.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거시적·장기적 측면의 계획 및 전략보다는 미시적·단기적 계획 및 전략의 이행 성과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② 특정 조직에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각 관점별 성과지표는 상이하겠지만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4대 관점은 변경되거나 확장될 수 없다.

③ 조직의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 간의 균형은 물론, 결과를 예측해주는 선행지표와 결과인 후행지표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④ 부서별 목표(하위계층 성과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조직전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취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균형성과표는 **조직 내부와 외부, 선행지표와 후행지표 사이의 균형**을 중시한다. 이미 나타난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요인도 함께 관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균형성과표(BSC)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여러 관점의 목표와 성과지표로 구체화하여 전략의 실행을 관리하는 체계이다.

① X: BSC는 **장기적·전략적 목표와 단기적 실행을 연결**한다. 개별 업무의 이행 실적만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비전과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관리하므로 미시적·단기적 계획에 더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② X: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은 BSC의 기본적인 네 관점이다. 그러나 고정된 틀은 아니므로 **조직의 특성과 전략에 맞게 관점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성과지표만 달라지고 관점은 변경·확장할 수 없다는 단정이 잘못이다.

③ O: BSC는 내부 프로세스와 학습·성장 같은 내부 역량뿐 아니라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점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미래 성과를 이끄는 선행지표와 이미 달성된 결과를 나타내는 후행지표**를 함께 사용한다. 결과만 측정하지 않고 그 결과를 만드는 활동과 역량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내부·외부 및 선행·후행 사이의 균형을 중시한다.

④ X: BSC는 기본적으로 **조직 전체의 비전과 전략을 부서·개인의 목표로 구체화하는 하향식 접근**을 취한다. 상위 수준의 전략에 맞추어 하위 성과표를 연결하므로, 부서별 목표를 먼저 정한 뒤 이를 모아 조직 전체의 목표를 만드는 상향식 접근으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내부·외부 요소와 선행·후행지표의 균형을 설명한 ③이 가장 적절하다.

NoteBase

문 21.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 기계적 능률을 중시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간주한다.

②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공조직과 사조직의 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공사행정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③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메이요(Mayo) 등에 의한 호손(Hawthorne) 공장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④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 Organization Development)을 중시해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고전적 조직이론은 공조직과 사조직의 관리에 공통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사행정일원론**에 입각한다. 따라서 공사행정이원론에 입각한다는 설명은 두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고전적 조직이론은 분업·표준화·계층제 같은 공식적 구조와 관리 원리를 통해 능률을 높이려 한다. 인간을 경제적 보상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보므로 기계적 능률을 중시한다.

② X: 고전적 조직이론은 공조직과 사조직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관리 원리를 추구하므로 **공사행정일원론**에 입각한다. 공사행정이원론은 행정의 공공성·정치적 성격 등을 근거로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③ O: 신고전적 조직이론의 출발점인 인간관계론은 메이요 등이 참여한 호손 공장 실험을 계기로 발전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적 보상이나 물리적 작업조건 외에도 **비공식집단과 사회·심리적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④ O: 현대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개방체제**로 보므로 동태적·유기체적 조직관을 취한다. 또한 행동과학 지식을 활용한 계획적 변화로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조직발전(OD)을 중시한다.

NoteBase

문 22.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과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으로 구분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이다.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자에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이 포함된다.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2번

①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로 구분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이다.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20.8.18, 2025.10.1, 2026.9.8>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법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개정 2003.2.4>

NoteBase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상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20.8.18, 2025.10.1, 2026.9.8>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3.7, 2003.2.4>

NoteBase

④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후보자의 적격성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료로서 **그 내용이 임명권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요청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해당 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2026.9.8>

인사청문회법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②의장은 인사청문요청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7.12.14, 2026.9.8>

NoteBase

문 23.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법적토대가 마련되었다.

② 연금조성 방식은 기금제와 기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③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④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6년이다.

정답 3번

①

196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이 제정·시행되어 공무원과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②

급여에 충당할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기금제**를 두고,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여제**를 적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권한과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공무원연금법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NoteBase

④

기여금은 재직 중 월별로 납부하되,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 제67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문 24. 우리나라 공무원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④ 모든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받는다.

정답 4번

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이며,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각각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NoteBase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 행정청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결정의 효력)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④

국가·지방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청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NoteBase

문 25. 다면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②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함에 따라 계층제를 통한 내부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다면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④ 우리나라 제도상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상사, 동료, 부하, 민원인 등으로 구성된다.

정답 3번

①

상사·동료·부하·민원인 등 다양한 평가자의 관점을 종합하므로 **상급자 한 사람의 편견이나 관찰 한계를 보완**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②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방식은 **상급자에서 하급자로 이어지는 계층적 권한의 방향과 반대**이므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내부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③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다면평가제도는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8년 12월**에 도입되었다.

④

다면평가는 해당 공무원의 **상급·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을 평가자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다면평가)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NoteBase

문 26.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타 기관과의 밀착을 방지하고 입법부나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설정할 수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③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는 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비독립단독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답 2번

①

독립적인 여러 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므로 **특정 기관과의 밀착을 억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법부·국민·행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

②

합의에 따른 결정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독립합의형의 장점이다. 비독립단독형은 단일 기관장이 결정하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③

행정수반과 정당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인사행정을 수행하므로 **엽관주의를 억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④

인사혁신처는 2014년에 신설된 중앙인사기관이다.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비독립형**이고, 합의제 위원회가 아니라 **처장 1명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단독형**에 해당한다.

정부조직법 제24조
① 공무원의 인사 · 윤리 ·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NoteBase

문 27.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을 말한다.
㉡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는 계급과 직위를 연계시키지 않아 인사행정의 수직적 융통성이 높다.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 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쉽다.
㉣ 직위분류제는 조직 및 직무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직위분류제는 계급에 따른 직위 임용의 제약이 적어 **수직적 인사이동의 융통성이 높다**. 그러나 직무를 세분화하여 엄격히 관리하므로 **조직·직무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보기별 해설

㉠ X: 제시된 설명은 '직급'이 아니라 **'직렬'**에 관한 것이다.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지만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집단이다. 직급은 직무의 종류뿐 아니라 곤란성과 책임도도 상당히 유사하여 채용·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 O: 계급제는 개인의 계급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직위를 제한하므로 계급 간 이동이 어렵다. 직위분류제는 이러한 신분적 계급의 제약보다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중심으로 임용하므로 계급제보다 수직적 융통성이 높다. 이는 직무의 성격이 다른 분야로 옮기는 수평적 이동까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 X: 직위분류제는 특정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전문화된 분야 사이의 협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여러 분야를 폭넓게 이해하는 일반행정가의 양성에도 불리하므로, 계급제에 비해 상위 직급에서 **업무를 종합하고 통합하기 어렵다**.

㉣ O: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내용·책임·자격 요건 등을 세분화하여 정한다. 조직이나 업무가 바뀌면 기존 직무분류와 인력배치를 조정해야 하므로, **분류체계의 경직성** 때문에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옳은 보기는 ㉡과 ㉣이므로, 이를 묶은 선택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8.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선택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피평정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행태기준평정법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도표식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한 방법이다.

④ 도표식평정척도법은 평정자의 직관과 선험에 근거하여 평가요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도표식평정척도법은 평가요소와 등급을 도표로 제시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평가요소를 직관과 선험적 판단에 따라 정하므로 **평정표 작성이 쉽고 빠르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등급별 인원 비율을 미리 정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피평정자를 배치하는 방법은 **강제배분법**이다. 특정 등급에 성적이 몰리는 현상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강제선택법은 여러 행동 서술문 중 피평정자에게 가장 잘 들어맞거나 들어맞지 않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② X: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자가 피평정자의 중요한 직무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직무수행에서 특별히 성공적이거나 실패한 행동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남긴다. 피평정자가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과는 구별된다.

③ X: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그 행동의 발생빈도**를 평가하는 것은 행태관찰척도법이다. 행태기준평정법은 각 성과 수준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 사례를 척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피평정자의 행동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평가한다. 따라서 도표식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한다는 뒷부분은 행태기준평정법의 설명이지만, 발생빈도를 측정한다는 앞부분은 행태관찰척도법의 설명이다.

④ O: 도표식평정척도법은 근무실적·능력·태도 등의 평가요소와 각 요소의 우열을 나타내는 등급을 도표에 제시하고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평가요소를 직관과 선험적 판단에 따라 정하므로 **평정표를 빠르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다만 평가요소나 등급의 의미가 추상적이면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하기 쉽다.

NoteBase

문 29.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예산의 통일성과 단일성 원칙에 위배된다.

③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정답 4번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설치**한다.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

기금은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하므로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며, **일반회계와 별도로 자금을 운용**하므로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③

법률로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NoteBase

④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전입·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등 법정 제외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 ·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 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3.28, 2020.6.9>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NoteBase

문 30. 성인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주가 1984년에 처음 도입하였다.

② 예산이 남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예산이다.

③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한다.

④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정답 3번

①

호주는 **1984년 최초로 여성예산서를 도입**하여 예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것이 성인지예산의 출발점이다.

②

같은 예산사업도 남녀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수혜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성인지예산은 **이러한 성별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성별 격차를 줄이려는 제도이다.

③

성인지 예산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며, 작성기준과 방식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2025.10.1, 2025.12.30>

④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역할이 달라 **같은 세입·세출예산도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NoteBase

문 31.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경우 개별 '특별회계설치 근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행정부의 재량 및 재정운영 자율성을 축소시킨다.
③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특별회계의 세입이 될 수 있다.
④ 특별회계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어려워 예산을 팽창시킬 우려가 있다.

정답 2번

①

특별회계는 **법정 목록에 열거된 개별 설치 근거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1.1>

②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의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므로 **행정부의 재량과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NoteBase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체 수입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반회계에서 이전받은 전입금도 포함**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 ·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 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3.28, 2020.6.9>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④

특별회계가 분리·운영되면 재정 전체의 규모와 지출을 파악하기 어려워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약화되고 예산이 팽창할 우려**가 있다.

NoteBase

문 32.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편성 사유와 무관하게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여부나 연간 편성횟수에는 법령상 제한이 없다.

③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1번

①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쟁·대규모 재해 발생,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또는 그 우려, 법정 지출의 발생·증가 중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법정 편성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의무인 것은 아니며, 연간 편성 횟수의 제한도 없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NoteBase

③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확정 후에만 배정·집행**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별도로 성립하지만, 성립 후에는 본예산과 통산하여 집행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에 함께 포함**한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국가회계법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 ·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teBase

문 33.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되어 있다.

② 총액인건비제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되어 있다.

③ 납세자 소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만 주민소송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중앙정부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④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고 중앙정부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정답 1번

①

총액배분·자율편성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체계**로 도입된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산제도는 아니다.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고, 각 부처가 그 범위에서 사업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조직·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중앙정부는 총액인건비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계승한 기준인건비제**를 운영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NoteBase

③

지방자치단체에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감사청구를 거쳐 다투는 **주민소송**이 도입되어 있다.
중앙정부에는 일반적인 납세자소송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 임차 · 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 · 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21조제12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1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 ·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앙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예산과정에 주민과 국민이 참여하도록 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2018.3.27, 2021.1.1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2020.6.9, 2021.6.15, 2021.9.24, 2021.12.21>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4.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사업비 관리 제도

② 수입대체경비

③ 총괄예산 제도

④ 총액계상예산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사업규모와 사업비의 변경을 관리하여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재정통제 제도이다. 집행기관의 재량을 넓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높이는 제도와 구별된다.

개념 구분

예산집행의 신축성은 예산이 확정된 뒤에도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출 규모나 세부 사용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제도가 집행의 재량을 넓히는지, 사업비를 통제하는지 구분한다.

총사업비 관리 제도: 완성에 2년 이상이 걸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 추진 중 무분별한 규모 확대와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재정통제 장치**에 해당한다.

수입대체경비: 국가가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얻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이다. 그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 경비와 그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수입 증가에 맞추어 관련 지출을 늘릴 수 있어 집행의 신축성을 높인다.

총괄예산 제도: 예산을 세부 지출항목별로 엄격하게 묶기보다 총액 중심으로 정하고, **정해진 총액 안의 구체적인 집행에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항목에 자원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집행의 신축성을 높인다.

총액계상예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예산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제도이다. 예산배정 전에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므로, 편성 때 세부내역을 모두 고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사업비 관리 제도이다.

NoteBase

문 35.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나 사법부가 행정통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창설된 제도이다.

②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는 1994년에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의회에 설치된 의회형**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정을 감시한다.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설명은 우리나라의 행정부형 옴부즈만과 혼동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옴부즈만은 전통적인 의회·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근대적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의회를 대신하여 행정권의 행사를 감시하는 장치로 출발하였다.

② X: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의회가 선출하는 **의회형 옴부즈만**이며,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공공기관의 법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부형**이므로 두 나라의 설치 위치가 같지 않다.

③ O: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여 행정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이다.

④ O: 옴부즈만이 조사 대상 기관의 압력이나 간섭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의 고충을 공정하게 판단하려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느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개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판단하는지는 구별된다.

NoteBase

문 36. 지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은 지식의 활용자로서 조직에 공유된 형식지식 (explicit knowledge)을 자신의 암묵지식(tacit knowledge)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③ 업무 매뉴얼, 정부 보고서 등은 대표적 암묵지식에 해당한다.

④ 지식관리를 통해 개인의 전문적 자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업무 매뉴얼과 정부 보고서는 문서로 표현하여 공유할 수 있는 **형식지식**이다. 암묵지식은 개인의 경험과 숙련에 체화되어 말이나 문서로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이다.

선지별 해설

지식관리는 조직 안팎의 지식을 창출·축적·공유·활용하여 구성원의 역량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활동이다.

① O: 조직에 공유된 형식지식을 학습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개인의 경험과 숙련으로 체득하는 과정은 **내면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식지식을 자신의 암묵지식으로 전환하면 업무 수행 능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② O: 지식관리에는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보다 구성원 간의 **지식 공유와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따라서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구성원이 함께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조직이 지식관리의 기반에 적합하다.

③ X: 업무 매뉴얼과 정부 보고서는 내용을 문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형식지식**에 해당한다. 암묵지식은 개인의 경험·직관·숙련에 체화되어 말이나 문서로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이므로, 이 두 문서를 암묵지식으로 분류한 부분을 형식지식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지식관리를 통해 구성원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업무 지식을 공유받고 이를 자신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과 활용은 **전문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개인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NoteBase

문 37.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자민주주의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전자적 문서처리는 문서를 생산, 유통, 보고, 승인, 관리, 보존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이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대정부 대국민 서비스 차원인 G2C(Government to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④ UN의 전자정부평가 보고서는 온라인 시민참여를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주며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정책수단”으로 보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G2C는 국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서비스에 반영하여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 따라서 '대응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전자정부의 효과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자민주주의는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이다. 온라인 정책토론이나 의견 제출처럼 국민이 **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

② O: 전자적 문서처리는 문서의 생산·유통·보고·승인·관리·보존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다. 종이문서를 단순히 화면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서 처리의 일련의 과정을 전자화**한다는 뜻이다.

③ X: G2C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관계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참여 확대를 포함한다.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서비스에 반영하면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시민참여 촉진은 전자정부의 효과이지만, 대응성이 낮아진다는 부분은 그 효과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다.

④ O: UN의 전자정부평가 보고서는 온라인 시민참여를 정부가 국민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수단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맞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시민참여를 맞춤형 정책수단으로 본 설명이다.

NoteBase

문 38. 지방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부공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나 차량등록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강제로 소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증권발행채는 기명채권으로 시장유통성이 없다.

④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발행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1번

①

지방채 발행 한도액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은 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인·허가나 차량등록 등 특정 서비스를 받는 주민·법인에게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매출공채**이다.
교부공채는 **공사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③

증권발행채는 대체로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어 시장유통성이 있다**. 기명채권으로 시장유통성이 없는 것은 **증서차입채**이다.

NoteBase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조합의 투자사업이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발행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구성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1.1.12>

NoteBase

문 3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과 같은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답 3번

①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의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NoteBase

③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의 임직원뿐 아니라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도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 · 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 · 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④

지방의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되면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NoteBase

문 4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상·하위 자치단체 간 사무의 배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포괄적 배분방식의 장점은 배분방식이 간단하고, 사무배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개별적 배분방식은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배분받은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관여를 용이하게 한다.
㉢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공공사무의 처리 권한을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위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무배분이 이루어진다.
㉣ 포괄성의 원칙은 탄력적 업무처리 권한 조정을 위해 동일·유사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사무들을 묶어 상위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동시 배분하는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개별적 배분은 사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상급기관의 자의적인 관여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포괄성의 원칙은 관련 사무를 **한 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묶어 배분한다는 뜻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포괄적 배분방식은 법률로 금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배타적으로 맡긴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무 처리 권한을 넓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무를 하나씩 지정하지 않으므로 배분 절차가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주어진 권한 안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X: 개별적 배분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무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해 **중앙정부나 상위 자치단체의 자의적인 감독·관여를 제한**하는 데 유리하다. 사무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상급기관의 통제가 확대되기 쉽다는 문제는 포괄적 배분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다.

㉢ O: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사무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상위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보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상위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권한을 배분한다는 설명이다.

㉣ X: 포괄성의 원칙은 관련 사무를 잘게 나누어 여러 계층에 흩어 배분하지 않고, 배분받은 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된 사무를 함께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상·하위 자치단체 모두에 동시에 배분한다는 뜻이 아니며, 동일 사무의 중복 배분은 오히려 권한과 책임을 불명확하게 한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과 ㉢이며, 이를 고른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